

'국민재산권 불편 해소책 마련 시행'

김윤덕 국토부장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전국 635개 사업지구 대상 총 387억 국비 투입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불편이 줄어들고 토지를 보다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오전 바른당 시스템 누리집(www.newjijik.go.kr)을 통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재조사'를 선정·발표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해 국민의 일상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규모는 150km²로, 전국 222개 지방정부, 635개



사업지구(17.9만 필지)를 대상으로 총 387억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면적·경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합치를 바로잡는 민생 기반 사업이다.

이는 경계·면적 등이 불분명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를 실제 이용 현

황에 맞게 정리해 공정한 토지질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토지 분석 결과 불규칙한 땅 모양을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땅이 해소되는 등 공시지가 기준 약 20억5,000만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업체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선정된 민간업체는 기술력과 현장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책임수행기관은 경계 조정 등 핵심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를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잠재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향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오늘 새만금 재생에너지 적기 연계 손 맞잡는다"

전북자치도, 9~13일 도정 주요일정 발표

2027 전주 아시아역도선수권 개최 협약

피지컬AI 포럼, 청년정책 시행계획 확정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9~13일 도정 핵심 일정과 주요 정책 추진 사항을 공개했다.

이철규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은 지난 6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청년정책, 1인 가구 안전망 강화 등 분야별 주요 일정을 설명했다.

먼저 9일 오전 10시 도청 회의실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적기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린다.

김관영 도지사과 김성호 기후환경부장관, 안호영 국회의원,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주관하는 이번 협약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지구 내 전력설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상호 협력 및 행정적 지원을 담고 있다.

김 지사는 같은 날 설 명절을 앞두고 효자·금암·봉동·팔봉 1192전선터를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한다. 행정부지사도 35시간 등 근무태도를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며 장병들을 격

려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전통문화의전당에서 '2027 전주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린다. 김중훈 경제부지사와 우병기 전주 시장, 대한역도연맹 최성용 회장 등이 참석해 대회 기획·운영 총괄, 경기장 인프라 정비, 행정·재정 지원, 아시아 역도연맹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담은 협약을 체결한다.

같은 날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는 '전북도 피지컬 AI 및 역사포럼'이 개최된다. 정동영 국회의원과 광영길 재경 전북도민회장이 협력해 마련한 이번 포럼에서는 강대석 전북 역사특별위원장이 '전북의 역사적 DNA와 미래 국가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피지컬 AI와 전북의 미래 산업 전략을 연계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10일 오전에는 도청 4층 종합상황실에서 '소상공인 화생 보듬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이 열린다.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신용보증재단, 11개 시·군, 8개 금융기관, 14개 소상공인연합



이철규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은 지난 6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9~13일 도정 주요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회 등이 참여한다. 협약 체결과 함께 시·군 소상공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진행된다.

11일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10대 청년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같은 날 한편과 '중장년 1인 가구 안부드든 살림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전기 사용 데이터를 활용

해 고독사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1인 가구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2일에는 정석케미칼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이 예정돼 있다.

또 KBS, MBC, JTV 등 지역 방송사에서 전국 초광역방송 관련 방송-전주 통합 문제 도지사 후보자 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며, 도지사 후보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문화누리카드 사업 개선해야"

김희수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 간 이용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희수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문화누리카드가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전북지역 문화누리카드는 14만 216매가 발급돼 발급률 100.74%를 기록했고, 이용률은 91.95%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총 194억 원이 지출됐다.

올해는 1인당 지원금이 15만원으로 인상돼 13만8,550명에게 약 2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성과가 수치가 그치지 않고 실제 문화 체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별 가맹점 불균형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온라인 1,503개소, 전북 오프라인 2,203개소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이용은 도서 구인과 영화 관람에 편중돼 있다.

특히 군 단위 지역은 가맹점이 부족해 문화 활동에 제약이 크다. 고령층이 디지털 사용 어려움과 교

통약자의 접근성 문제도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혔다.

또한 발급률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실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안내와 가맹점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부터 일정 금액 미만 사용자는 자동 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전 안내 강화도 요구됐다.

김 의원은 개선책으로 공연·체험을 포함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1대1 이용 지원체계 구축, 전북 특성을 반영한 문화복지 모델 개발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3년간 41억원이 미집행돼 반납됐다"며 "이제는 발급률이 아닌 도민 체감 중심의 문화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인구 감소, 구조적 위기"

김명지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 감소가 구조적 위기로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은 5분 발언에서 "2012년 이후 전북 인구는 단 한 차례의 반등 없이 감소세를 이어왔다"며 "인구 문제를 복지 차원이 아닌 재정과 직결된 핵심 전략 변수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의 인구 감소는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계기로 급격히 확대됐다.

이후 연간 1만5,000명 인구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인구는 172만4,889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 170만명

붕괴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는 보통교부세 축소와 재정 여력 약화로 이어져 정책 집행 능력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1만6,000명 감소에 이어 2025년에도 1만4,000명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주 시에서 1만명이 넘는 인구가 줄어든 점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인구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역 재정과 미래를 좌우하는 변수"라며 "구조적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만성지구-기지제 보행육교 전주시가 안전성 검증해야"

전주시장 출마' 국주영은 도의원, 촉구 나서

"진동 발생" 시민 우려 언론 보도 통해 제기돼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주영은(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별보좌관,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 도의원은 지난 6일 임정문을 통해 만성지구 기지제 보행육교의 진동 및 안전성 논란과 관련, 전주시의 즉각적인 안전성 검증 등을 촉구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임시 개통된 만성지구 기지제 간 보행육교에서 진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육교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과 기지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국주영은 도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확보에 일조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한 인물로, "직접 예산 확보에 함께한 당사자로서 현재 제기되는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전주시가 구조역학 전문가가 교량 설계 및 시공 전문가가 관련 설계 교수 등이 참여하는 민간 합동 검증단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전주시 자체 점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 검증을 통해 시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검증단 구성부터 조사 과정,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주영은 도의원은 "신뢰는 투명성에서 비롯된다"며 "검증 과정과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해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시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행정적 '문제가 없다'는 설명에 머물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주영은 도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단 0.1%의 방심도 허용될 수 없다"며 "만성지구-기지제 보행육교가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로이자 진정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완주·전주 통합시장 선거 치르자"

성치두 전주시장 출마예정자 "인구 감소 등 대응 위해 정치권이 통합 논의 본격 나서야... 후보들의 결단 필요"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성치두 전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완주·전주 행정 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시장 선거' 실시를 제안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권이 통합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치두 출마 예정자는 완주군수 후보들과 전주시장 후보들이 각각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제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이 협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결단하면 통합시장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인구 규모 등 차이를 고려해 기존 완주군수 후보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전주시장·완주군수 후보들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치두 출마 예정자는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완

주·전주 통합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타 지역 광역단체 통합 때보다 더 큰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전북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의 인구 감소 현실을 지적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조선시대 전국 3~4대 도시였던 전주시가 현재 인구 기준 전국 17위에 머물러 있다"며 "이대로 가면 수년 내 20위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전북 출생지의 70%가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전국 인구가 증가하는 동안 전북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은 지역이 심각하게 소외돼 왔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성치두 출마 예정자는 "전주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전북 전체의 준립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며 "전북 정치권과 민주당 정권이 책임 있는 자세로 통합과 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성 후보의 '통합시장 선거' 제안이 지역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입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만호 기자

"교통약자 이동권 후퇴"

전용태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이 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축소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제42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개정된 규정이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자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면서 4~5등급 등 경제상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진단서로도 이용이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 서류 기준이 강화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동수단이 없어 병원 방문이나 생계활동을 포기하는 사례

가 나타나고 있다"며 "수요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이동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월러 국토교통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권의 증진계획과 관련된 전북자치도의 계획 수립이 지연된 점을 '뒷방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법적 시기와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운영규정 재검토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전북자치도에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임종명 도의원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전면 개편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정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현행 제도가 경기 부양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은 낮고 현장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제안서를 통해 "신속집행제도가 예산의 효율적 운용보다 집행률 수치 달성에 치중하는 방식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소비성 예산과 자본성 예산을 구분한 유연한 집행 기준 마련, 집행률 중심 평가에서 성과 중심 평가로의 전환,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